

전매광장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자마자 이후라 전 중앙정보부장에게 사람을 보내 '국내에서 편하게 살라고' 했다.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다. 1980년 자신을 사형시키려 했던 전두환을 용서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1973년 동경에서 자신을 납치하여 바다에 투항시키려 한 사람을 용서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 역사는 자신을 죽이려 한 정적을 용서한 대통령도 배출했고, 수평적 정권교체도 이뤘으며,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도 진입했다.

용서·화해 철학 계승 못해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정치권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용서와 화해 철학을 계승하지 못하고 있다. 한 예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을 수사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죽음으로 향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여야 간 경쟁을 죽이살기식으로 격화시켰다. 또 정치권을 넘어서 진영 간 대립으로 확대시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도 이런 분위기와 전혀 무관하다

에세이



탁현수  
수필가·문학박사

플루치 한 마리가 공중 곡예를 뿜-뿜다가 저만치 내려앉는다. 커다란 물 주전자와 들고 깡강대던 여자아이의 신발을 벗어두고 살금살금 까치발 걸음이다. 어느새 알아차리고 포르르 날아가 버리는 플루치를 걸러내 올려보다가 시루봉에 걸린 흰 구름의 그림 솜씨에 넋을 잃어버린다.

어머니와 윗말 당숙모는 밥과 반찬 광주리를 머리에 인 채 앞장서고, 아랫집 경식이 오빠는 술과 찌개를 지고 휘파람을 불며 뒤따른다. 반질반질한 황톳길을 돌아 '비암들'을 건너면 북독까지 물이 잘गर거리는 '상보' 들판이 한눈에 펼쳐진다.

뱀이 유난히 많아서 붙여진 이름 비암들. 씨

특지광장

아주 그럴듯한 내용의 보이스포싱 전화나 문자 등을 받아 본 적이 있는가? 이미 많은 보이스포싱 예방 관련 홍보나 피해를 보도하는 언론에 장기간 학습했기에 의심의 눈초리로 금융사나 112로 전화를 걸어 볼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스마트폰 해킹을 통해 '악성 앱(App)'이 설치되어 있다면 '전화 가로채기' 수법으로 112나 은행 대표 번호 등 어디에 전화를 걸어도 마치 영화처럼 사기꾼이 전화를 가로채서 받게 된다.

경찰청에서도 이러한 의심에도 속게 되는 '전화 가로채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손을 잡았다. 보이스포싱 조직의 '전화 가로채기' 수법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갈수록 진화하는 악성 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 최신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앱 설치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받되

정치보복과 '법대로'의 경계선

고 말할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 때 이명박 정부와 검찰은 '법대로'를 강조했고, 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했다. 시간이 흘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와 구속을 당할 때도 문재인 정부와 검찰은 '법대로'를 강조했고 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상반된 주장에서 보듯 정치보복과 '법대로' 사이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대신 이런 사건이 거듭될수록 정쟁은 심화하고 국론 분열은 깊어졌다.

2022년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중 패배한 사람은 선거 후 감옥에 갈지 모른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았다.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대선은 승자독식의 게임이다. 역대 대통령 선거 모두 항상 치열했고 살벌했다. 그러나 이번처럼 선거 과정에서 패한 쪽은 감옥에 갈 것이라는 수준의 험한 말까지 나오지는 않았다. 2022년 대선은 선거가 아니라 전쟁이었다. 미움과 증오의 전쟁.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한 달가량 지났다. 검찰과 경찰은 각각 대장동 사건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용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경찰도 총대를 댔다. 검찰 타도만을 외치는 민주당으로서의 허를 찔린 셈이다. 이번 수사를 놓고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반대로 윤석열 정부는 '법대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를 변호할 생각은 없다. 양측의 해석 중 어느 것이 맞고 그르다는 말도 하고 싶지 않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하게 상기

시키고 싶은 게 있다. 지금까지 여러 명의 대통령이 퇴임 후 수사를 받고 구속된 사례는 있었지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사람과 그 가족이 선거에서 패배한 직후 수사받고 구속된 사례는 없었다는 점이다. 그 험한 정치 역정 속에서도 그랬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기간에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을 방문했고 멀리 신안군 하의도까지 갔다 왔다. 김대중 대통령의 화해와 통합 정신을 본받았다고 했다. 또 그는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노무현 영화를 보고 많이 울었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윤 대통령이 노무현 영화를 보고 울었다는 소문을 듣고 나는 그가 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탄압에도 분노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나쁜 선례' 만들 것인가

대선 기간에 쓴 어느 글에서 필자는 선거 후 어느 쪽에 의해서든 또다시 정치보복에 준하는 사법행위가 발생하면 우리 사회는 폭발해버릴지 모른다고 썼다. 거듭 말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정치보복과 '법대로'의 경계선 논쟁은 무의미하다. 윤석열 정부와 검찰·경찰이 뭐라고 말하는 국민의 반쪽은 이재명 의원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둘 중 하나의 선택권이 주어졌다. '법대로'를 강조하며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과, 용서·화해와 국민통합이라는 좋은 선례를 따르는 것이다. 어느 것을 선택하는지 국민과 역사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고향의 모내기

레질 끝에 병병히 물을 가뒤놓은 매끈한 눈에 허를 날름거리며 살래살래 해엄쳐가는 물뱀, 눈독 음침한 곳에 새끼를 까서 구물구물 파리를 들고 앉아있는 늙은 뱀, 유독 민첩해서 '스르르' 소리와 함께 길옆 짙레꽃 위로 몸을 감추는 꽃뱀, 길가에 능청스럽게 축 늘어져 버티고 있는 능구렁이. 은갖 들꽃과 송사리, 울챙이 등 호기심 천국인 논둑길에 그놈의 뱀만 사라져 주변 마냥 즐거울 것 같았다.

어머니의 채근에 끌려 뱀뚱에 도착해 보면 뱀을 기다리는 동네 아이들이 모를 내는 사람들의 굵은 뺨다. 푸르르 가는 들판의 인심인 고깃국에 찹뱀, 모처럼 만의 다디단 특식이었다.

"하이, 하이"

뚱뚱잡이의 구령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손놀림은 어떤 춤사위가 그보다 흥겹고 진실할까. 동네 개들까지도 바빠진다는 신명 나는 소생의 한철이었다.

모내기 철이면 나는 혼자만의 은밀한 비밀 하나를 수행하기 위해 손잡이 기다리고 기다렸다. 눈 귀통이 후미진 곳에 어른들 몰래 모 몇 포기씩을 심어놓고 추수철까지 들여다보는 재미만...! 어른이다 된 기분이었을까, 순전히 나만

의 오롯한 1년 농사였다. 어느 해였는가. 뱀뚱이 필 무렵 그 비밀을 엿보다가 까무러칠 뻔했다. 기대했던 뱀뚱은 어디 가고 피뚱만 너울너울... 어른들이 모를 내다가 논둑에 던져버린 피뚱을 버로 알고 잘못 심은 것이었다. 그 답답했던 유년의 경험은 평생 농부의 심중을 헤아리는 척도가 되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세월을 들고 돌아 허연 귀밑머리를 이고서야 겨우 고향의 들판에 섰다. 한데 그 많은 이야기거리도, 땀 흘리며 신명나게 뛰어나다던 사람들도 모두 사라지고 산천마저 숨을 멈춘 듯 적막이 흐른다. 겨우 두 사람의 인부가 두부만 같은 어린 모들을 이양기에 싣고 기계 소리만 요란하게 온 들판을 헤집고 있다. 허를 날름거리던 뱀과 울챙이, 송사리들은 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목이 빠지게 짐승을 기다리며 까만 얼굴에 눈만 반짝이던 아이들의 하얀 웃음소리가 환영처럼 밀려왔다가 멀어져 간다.

짐승을 먹던 뱀뚱에 두 다리를 죽 뺀고 앉아서 망연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나마 아직 하늘빛은 푸르렀고, 시루봉의 흰 구름과 산들바람의 숨바꼭질도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전화 가로채기' 보이스포싱 주의

라도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또 '구글 플레이 앱' 같은 공인된 앱 마켓을 통해서만 앱을 내려받도록 해야 한다.

의심스러울 때는 해킹의 가능성이 있는 자신의 스마트폰이 아닌 타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112나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받는 것이 좋으며 수고스럽더라도 가장 가까운 파출소나 은행에 직접 방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끝으로 수사기관은 절대 전화 통화 방식으로 사건 조사를 진행하지 않으며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로 구속영장 등 공문을 촬영하여 보내지 않는다. 금융기관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직원이 길거리에서 직접 현금을 전달받는 경우는 없다. 앞서 말한 내용을 잘 숙지한다면 돌이키기 힘든 큰 피해로 이어지기 전에 이를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문정태 진도경찰서 읍내파출소

1989년 6월 29일 창간		<b>전남매일</b>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b>朴哲弘</b>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b>金善男</b>		편집국장 <b>姜露秀</b>	
jndn.com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1-5323	
정치부 (062) 720-1060	문화체육부 (062) 720-1071	월간국 (062) 720-1007	경제부 (062) 720-1067	사건부 (062) 720-1040	사업국 (062) 720-1011,1099
사회부 (062) 720-1050	기획탐사부 (062) 720-1045-46	광고국 (062) 720-1016-17	사회2부 (062) 720-1043	편집부 (062) 720-1073	관리국 (062) 720-1012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사제보 jndn@chol.com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전변차로 398 (사동)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전변차로 398 (사동)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지역문제 해결 '민관협업' 주목

전남도가 쉽게 풀리지 않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업을 본격화했다. 전남도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어우러져 난제를 해결해가는 '전남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가동했다고 한다. 으레 지자체 문제는 행정 당국의 소관으로 인식돼 왔으나 민관이 머리를 맞대며 최적의 해법을 모색하는 일은 매우 바람직스럽다. 이 같은 민관협력은 자치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적극 장려되어야 한다.

전남도는 과거 예산 투입 방식의 문제 해결 방식을 지양하며 민관협업 차원에서 40여 개 과제를 발굴, 최종적으로 실행의제 20개를 선정했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전략의제로 RE100 시민클럽, 커피박 친환경 재자원화 사업 고도화, 청소년 탄소제로카페 '방탄' 운영,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이 없는 자유로운 목포 '프리하링' 만들기, 어르신 생활안전 키트 설치 등 5개 의제를 채택했다.

여기에 일반의제로 다문화가정 2세 통상 전문가 양성,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사이영 콘서트', 공공기관 불용용품 새 활용 사업,

취약계층 컴퓨터 수리단 운영, 시각예술을 통한 노인 마음치료 등 15개 의제를 확정했다. 모두 실질적인 지자체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제들이다. 전남도는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전남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자원 매칭데이' 행사를 가졌고, 의제실행 기관 상호 소통과 교류를 위해 다음달 의제 실행 협약식을, 11월 성과 공유회를 열 계획이다.

갈수록 사회문제는 복잡해지고 있다. 크기는 기후변화와 지역소멸, 사회적 양극화 등이 대두되고 있고, 보다 세분화하면 지역 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장애인 인식 개선 등의 문제가 얽혀 있다. 특히 성숙한 지자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예산 지원뿐 아니라 지역민 스스로의 내부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방식이 요구된다. 정부가 모두 해결 수 없는 일이므로 탄소중립과 같은 중차대한 목표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서는 지역민 스스로의 노력과 동참이 필수적이다. 이번 전남도의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민관 협업의 본보기로 자리잡아가기를 기대한다.

신안 씨원아일랜드 주민상생 필요하다

일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호텔과 리조트를 개장하면서 동시에 인근 주민들과 불협화음을 일으킨 신안 씨원아일랜드가 빈축을 사고 있다. 씨원아일랜드 운영주체인 ㈜지오그룹은 최근 신안 자은면 일원에 호텔과 리조트, 대형 컨벤션을 지으면서 장애인 편의시설 등은 마무리 하지 않은 채 그랜드오픈 행사를 가졌다.

씨원아일랜드는 향후 자은해양관광단지를 개발할 계획으로 서남권 지역의 체류형 관광기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정작 지역민과의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고 행사장 주변정리와 참석자들의 안전을 위한 배려가 전무하다시피 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 때문인지 행사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구간에는 불만 섞인 플래카드 줄을 이었다. 비상대책위는 '(사태의)모든 책임은 지오그룹에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 등의 문구로 분위기를 전했다.

이를 입증하듯 개장 행사가 열린 호텔과 리조트 정문 주위에는 장비가 동원돼 여전히 공사중이었고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주차장은 정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아 참석자들이 불만을 터뜨렸다. 행사장 옆에는 길게 늘어선 컨테이너와 건축물 자재, 구조물 등이 아작돼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여기에도 씨원아일랜드 오픈으로 평소 이용하던 인근 백길해수욕장 출입 역시 불편을 겪고 있었다.

주민들은 청년회의 소득 창출을 위해 리조트 내 매장 임점을 약속했으나 지오그룹 측이 외부 주차장의 몽골텐트로 대체할 것을 통보했다며 어이없어했다. 이어 업체 측이 주민들과 상생을 위해 수차례 달콤한 제안을 해왔으나 지켜진 것은 없다면서 지역민을 기만하는 지오그룹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기름을 붓듯 업체 측이 자은면 비대위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오히려 주민들에게 화살을 돌린 가운데 박우량 신안군수가 중재에 나섰다 양측의 입장을 좁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오그룹이 사업 초기 당시 마을주민들과 한 약속을 성의껏 지켜 상생을 회복하는 것이다.

고흥 우주산업 메카 기대

기지사첩



길용현

정치부 차장대우

리호발사 성공을 발판 삼아 민간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로의 전환을 선포한 것이다.

기술혁신으로 발사체와 위성의 생산비용 장벽이 낮아지고 고체연료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우주 시장 선점을 향한 각국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정부도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민간기업 재정·세제 혜택 지원, 정부 우주개발 시설 민간 개방, 우주 창업 촉진 및 인력 양성 등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전남도 또한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고흥군 봉래면 외나로도 일대 28.4㏊에 오는 2031년까지 8,082억 원을 투입해 우주 특화산단과 우주 개발 핵심 인프라, 연구개발 지원센터, 우주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2031년까지 10여 개의 발사체 기업 유치와 7,262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2,451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유일의 우주 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를 보유한 전남은 글로벌 우주발사체 산업을 육성할 최적의 장소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흥을 중심으로 우주 산업 기반을 확실히 구축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열약한 지역산업의 체질 개선이 이뤄질지 기대한다.

순수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개발한 첫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II)'가 발사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마침내 무게 1톤 이상의 실용급 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세계 일곱 번째 국가가 됐다. 이는 중대형 액체로켓 엔진, 대형 추진체 탱크 제작, 발사대 등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누리호 발사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2027년까지 4번의 추가 발사를 통해 누리호의 기술적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며 "앞으로 정부는 다양한 정책·제도적 지원을 추진해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발사체 개발 기술력에서 우주 선진국에 비해 다소 뒤져있다는 평가를 받았던 우리나라가 누